

오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오리업계 전체 공감대 형성이 중요

방역 최우선 고려 '사육시설 개편안' 강조

이정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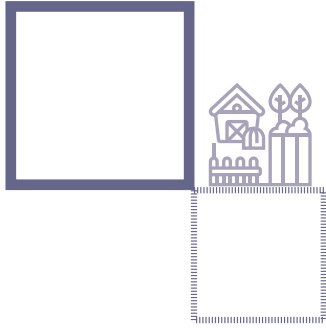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2003년 이후 겨울철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대한민국 오리산업이 공격을 받고 있는 사이, 보다 근본적인 AI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오리사육제한을 AI 방역정책의 핵심으로 밀며 6년째 정례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리업계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오리업계에 조언을 하며 정부의 정책과 오리업계의 요구의 절충안을 마련, 오리업계에서는 일명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업계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의 모습에 많은 오리업계 종사자들은 그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정삼 과장이 생각하는 AI 방역정책과 오리업계에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비용 부담, 개축금지 조례 등 법적 규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현실적 제약요인
신규농가-기존농가 다른 방향 접근해야



신규 오리사육 일반건축물만...법령개정 검토
기존농가, 방역기능 강화 개축시 규제 완화
개축농가 대상 방역설비 지원 등 필요

오리 축사현실 실태조사 실시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AI 발생과 오리 사육 제한 등으로 오리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리농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먼저 밝힌 이 과장은 AI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짚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AI 27건 중 24건이 가설건축물에서 발생했습니다. 타 가금류에 비해 오리농가에서 AI 발생이 좀 더 빈번한 것에 대해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의 방역회의 등에서 오리 축사의 열악한 환경이 오리농가가 방역상 취약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이 과장은 이에 실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전국 닭·오리농가의 시설 형태, 법령상 개축 가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업종별 가설건축물 비율을 살펴보면 오리가 6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종오리가 53.7%로 종오리 농장의 절반 이상이 가설건축물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닭은 호수는 많지만 전체 농가에서 비율로는 31.2%가 가설건축





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종계는 8.8%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장은 가설건축물의 호수보다는 실제로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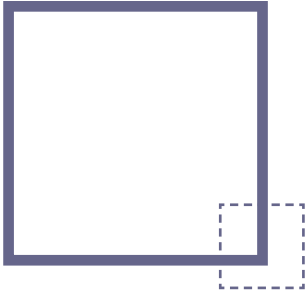
“오리농가의 약 60%가 가설건축물 축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양계농가의 가설건축물 축사 소유 비율인 30%의 두 배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오리 농가가 가설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농가 축사개축 의지 불구 현실적 어려움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비닐하우스 오리농가 439호를 대상으로 축사 개축 의향과 축사 개축 장애요인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농가의 상당수는 오리 축사 개선은 방역측면에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오리농가들은 축사 개선 비용에 대한 부담, 개축을 금지하는 조례 등 법적 규제 등이 축사 개선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과장은 “농식품부는 오리 축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신규농가와 기존 농가에게는 각기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신규 오리 사육업 허가 요건으로 일반건축





물에만 오리 사육을 가능하도록 하는 축산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존 농가의 경우에는 방역기능이 한층 강화된 축사로의 개축 지원과 개축 관련 규제 완화, 그리고 개축 농가 대상의 방역 설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과장의 의견이다.

시설현대화사업, 오리업계 전체 공감대 형성돼야

이 과장은 기존 농가 대상의 ‘오리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검토돼야 할 몇 가지 과제를 강조했다.

우선 오리협회에서 마련 중인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편안에 방역상의 고려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보다는 방역상의 고려를 중점적으로 사육시설 개편안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사육시설 개편안에는 신축 축사 유형에 따른, 이를테면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판넬형 가설건축물, 일반건축물 각각의 비용분석이 필요하다”며 “비닐하우스에서 판넬형으로, 판넬형에서 일반 건축물로, 비닐하우스에서 일반건축물로 개축에 따른 비용분석을 통해 추후 신규사업 검토가 있게 된다면 이러한 분석들이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마지막으로 오리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오리업계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